

소통이 필요한 한·중 관계, 양국 언론의 역할은?

한혜연
연속교육팀



5월 7일 인민일보(人民日報), 신화망(新華網), 신경보(新京報) 등 중국 22개 주요 언론사 언론인 30명이 위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방문을 통해 한국의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소개하고 한중 양국간 분쟁 예방을 위한 언론의 역할에 대하여 소통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제1세션에서는 위원회를 소개하고 조정·중재 처리절차를 다양한 사례를 곁들여 설명했습니다. 중국 언론인들은 조정 이의신청 후의 처리절차, 초상권 관련 사례 등 여러 질문을 하며 언론피해구제제도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도 광저우(廣州)에 의료분쟁 관련 ADR기구가 신설되는 등 ADR기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한국 언론중재위원회의 노하우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어 제2세션에서는 인민일보의 인터넷판인 인민망(人民網)의 저우위보(周玉波) 한국지사장이 ‘한중 양국간 분쟁 예방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하였습니다. 부제는 ‘한중의 사이버 민족주의와 언론의 역할’로 인터넷이 반한(反韓), 반중(反中)감정이 확산되는 주요 통로임을 강조했으며 허위정보 유포와 언론의 오보로 인한 피해사례와 그 영향 등을 분석했습니다.

저우위보 지사장은 첫 사례로 2005년 한국에서 강릉단오제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일이 중국에서 큰 논란이 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저우위보 지사장은 한국의 단오제와 중국의 단오절은 큰 차이가 있다며 강릉단오제는 단오절 전후 50일 정도의 기간에 지내는 제사와 각종 전통문화 활동을 가리키며 중국 단오절은 중국 시인 굴원(屈原)을 기리는 명절임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일부 미디어는 “중국의 전통명절이 도난당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단오가 한국 것이라면 한방침술은 누구의 것인가?” 등의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오보 사례로는 2008년 중국의 한 네티즌이 “한국 성균관대 박분경 교수가 쑨원(孫文)이 한국 혈통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는 글을 띄워 당시 이 글이 중국 신문과 인터넷에 확산되면서 파문을 일으켰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분경이라는 교수는 존재하지 않았고 이 오보는 그해 ‘중국 10대 오보’로 꼽혔습니다. 저우위보 지사장은 중국인의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높은 편이고 관영 미디어에 대한 신뢰는 더욱 깊어 이러한 보도의 영향은 매우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부 한국 언론의 중국 관련 보도 또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저우위보 지사장은 오보로 인한 반한, 반중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양국 언론이 책임의식을 갖고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후베이(湖北)일보 스귀(史果) 기자는 본 교육이 한국의 언론피해구제제도를 알게 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고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방문 소감을 전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중국 누리꾼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5.64억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허위정보와 오보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유포되고 이를 통해 반한감정이 깊어진다면 양국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한국과 중국이 더욱 가까워지고 교류가 늘면서 오해나 분쟁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렇기에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며 중국 언론인과의 지속적인 교류로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오해를 줄이는 것이 양국관계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언론분쟁 예방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